

실용·변화 키워드로 대한민국 지도 넓히겠다

■ 취임사로 본 국정 운영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발전'과 '통합'을 향후 국정운영의 양대 기로 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가 결실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더불어 '사회·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용'과 '변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외교와 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노선'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요체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자는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서에 서명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강소정부' 만들어 효율 극대화

이 대통령은 변화의 최일선에 서야 할 주체가 정치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데 있으나 정치가 국민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리당락과 정쟁에 몰두하는 '여의도식 정치'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과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화와 상

생의 정치,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의 정치를 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이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동시에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실용정치를 하자면서 소모적인 정치관행의 과감한 결별을 거듭 주문했다.

필요할 경우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앞서 당선인 신분 시절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결국 이런 점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는 분석이다.

경제

기업 걸림돌 규제 과감히 철폐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선진화 달성을 위해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뒀다. 이는 판단에서다.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해 기업인이 국내외 무대에서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노사문화에 대해 "노(勞)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로 어느 하나가 제 몫을 못하면 수레가 넘어진다. 과격한 투쟁은 자멸을 가져온다"며 서로에 대해 한걸음씩 다가섬으로써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글로벌 시대에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일 뿐 아니라 내수 만으로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사회·교육·문화

자율·경쟁의 교육 본격화

이 대통령은 성장 못지 않게 복지도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사회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서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선진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정책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시민권과 사회권 확장에 힘쓰고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

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인재대국의 첫 번째 실천방안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획일적 관치교육과 폐쇄적 입시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또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교육철학이다. 특히 관치의 상징인 교육부 통폐합 등 정부 차원의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유형을 다양화하면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고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 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사 <요지>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

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정열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 합니다. 실용정신은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

이 하는 일입니다.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입니다.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납니다.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입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외교·안보

한미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국익에 바탕을 둔 실용외교로 집약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여 정부에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한층 강화하고 특히 일본·중국·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강화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할 것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원외교'와 '기여외교'라는 메시지도 새롭게 던졌다. 우리 경제의 엔

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기여외교란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맞게 국제협력에 앞장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남북관계

가 더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10년 안에 3천 달러 소득이 되도록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3천 구상'을 소개하면서 남북정상이 언제든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